

별첨

지방 우대금융 주요성과 및 확산계획

2026. 6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추진 경과	1
II. 지방 우대금융 주요성과	2
[별첨]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('25.10월) 추진상황 ...	3
III. 지방 우대금융 확산계획	5
IV. 향후계획	6
[참고1]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('25.10월) 주요내용	7
[참고2] 정책금융기관 지역우대 상품 현황	8
[참고3] 상생금융 현황 및 향후계획	10
[참고4]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개념	11

I. 추진 경과

-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적 발전으로 국가 성장동력 훼손
 -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, 수도권-비수도권간 경제성장 격차 확대
 - * 지역총생산 비중(20→24년) : (수도권) 48.5%→52.8% (비수도권) 51.5%→47.2%
 - 우리경제의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, 경제활동의 수도권 쏠림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*과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등 악영향 초래
 - * (수도권) 가계·기업의 주거·임차비용 상승, 과잉경쟁으로 저출산 가속화 등 (비수도권) 도로·항만 등 유희인프라 발생, 청년·인재 유출로 혁신 저하 등
- 지역경제 성장을 통한 수도권-非수도권 격차 해소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선결문제

- 그러나, 금융의 지역경제 성장 기여는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
 - 지방에 공급되는 금융규모는 지역 경제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
 - * (비수도권 지역총생산) 47.2%^{24년} / (정책금융 공급) 40.0%^{25년} (시중은행 공급) 31.1%^{25.6월}
 - 정책금융은 다양한 우대금융 확대 노력에도 지역 산업재편 및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,
 - 민간금융은 상업적 금융제공에 따라 전략적인 지역 산업·기업 육성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

- 이에 금융위는 '25.10월 「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」 발표[참고1]
 - 금융이 지역경제를 견인하여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마중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로드맵으로,
 - 정책금융은 지방에 공급되는 자금 규모와 우대조건을 대폭 강화, 민간금융은 인센티브·규제 개선으로 지역금융 확대를 유도

Ⅱ. 지방 우대금융 주요성과

① 정책금융기관 총 자금공급의 **44.1%**(25.2조원) 지방 공급(~26.1Q)

- '26년 지방 자금공급 목표 비중인 **41.7%**를 크게 상회
 - ※ [연도별 목표액비중] ('26) **106조원·41.7%** → ('27) 112조원·43.0% → ('28) 121조원·45.0%
- 1분기 공급액인 **25.2조원**은 年 공급 목표(106조원)의 **23.8%** 수준

< '26.1분기 비수도권 자금공급 규모 및 비중 >

	산 은	기 은	신 보	기 보	합 계
규모 (조원)	6.9	7.2	7.3	3.8	25.2
비중 (%)	(46.9)	(37.3)	(47.7)	(49.4)	(44.1)

- √ (사례) 산업은행은 충북 증평군에 공장을 신축하고 본사를 서울에서 충북으로 이전하려는 건설용 강관 제조 전문기업에 대해 **250억원 대출** → 지방이전 기업에 약 **0.7%의 금리 우대 적용**으로 연간 **1.8억원의 이자 부담 절감**

② 국민성장펀드 총 투자승인(12.5조원) **41.0%**(5.1조원)가 지방사업(~26.5월)

- 국민성장펀드 비수도권 지원 목표 비중인 **40%**를 상회
- '26.1월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총 **10건의** 지방 프로젝트에 투자 승인하여 지역경제 미래 성장 동력 육성
 - ※ 투자 승인/지방 사업(금액/건) : 12.5조원 / 5.12조원[41.0%], 16건^{메가} 11건 / 10건^{메가} 5건

< (전남)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> < (경북) 차세대바이오백신 설비 >



③ 은행·저축은행 규제 개선을 통해 **지역 민간금융 확대** 기반 마련

- 은행의 지방 기업·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 하향*('26.4월~), 비수도권 예대율 완화 등 「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**」 발표('26.2월)

* (비수도권 기업) 85 → 80% (비수도권 개인사업자) 100 → 95%

** 비수도권 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, 비수도권 소재 차주 신용공여 한도 상향

1

정책금융

< 발표과제('25.10월) >

◇ 정책금융은 금리·보증료 등 직접 우대조건 강화 및 규모 확대

- * ①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 신설 ② 지역 금융에 대한 우대조건 확대
- ③ 지역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④ 지역 정책금융 인프라 혁신

①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 지방 자금공급 실적 배점 확대* ('25.11월) 등을 통해 지방 자금공급 목표제 달성 유도

* 지방 자금공급 목표 대비 실적 관련 배점 확대(2.5→3점)

② 지방이전, 지역주력, 경영애로, 무역금융 등 지방기업 상황별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[\[참고2\]](#)

○ 특히, 지역 산업육성 프로젝트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하여 대출·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의 유기적 연계 지원 추진

√ (사례) 현대차그룹은 수소, 로봇 등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9조원 규모 새만금투자 프로젝트 추진중 → '26.4월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지원 MoU 체결

③ 지역전용펀드(국민성장펀드)*, 지역활성화펀드**를 통해 지역 투자

* '26.4월 방안 발표 → 매년 2,000억원의 지역전용펀드 조성, 지방운용사 우대

** 8개 지역 3.6조원 규모 8개 프로젝트 선정, 인구감소 등 지역 투자비율 상향(1/3→1/2)

< (경남)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> < (전남) 장성 첨단 데이터 센터 >



④ 지역 기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IBK 창공 대구('25.10월) 신설

⑤ 추가10년간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(녹색/전환)을 공급하고, 50% 이상 지방에 공급 추진 ('26.2월, 「기후금융 활성화 방안」)

2

민간금융

< 발표과제('25.10월) >

◇ 민간금융은 인센티브·규제 개선으로 지역금융 확대 및 접근성 제고

- * ①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② 저축은행·상호금융의 대출확대 기반 강화
- ③ 저축상호금융의 지역 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④ 은행 비수도권 규제 개선

- ① 지방-인터넷은행간 공동대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방은행의 수익성 제고 및 고객기반 확대

< 공동대출 운영성과 >

◇ 공동대출을 통해 총 6.5만건, 1.7조원 대출 취급('24.8월~'26.3월)

◇ 인터넷은행의 우수한 광고·모객기반, 지방은행의 자금력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완화* 및 지방은행 경쟁력 제고 기여

- * 예) 광주-토스은행의 경우 기존 광주은행 신용대출금리 대비 평균 2.2%p 절감

- ② 저축은행·상호금융이 지방소재 부실채권을 원활히 정리하여 지역 금융공급 여력이 확대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 설립 추진

- * (저축은행) '26.2월 자산관리회사 설립방안 발표 → '26년 중 개정안 마련 예정
- (상호금융) '26.4월 실험법 개정완료 → '26.10월 법 시행 예정

- ③ 저축은행 비수도권 차주 대출 한도 상향* 및 비수도권 대출 예대출 우대 방안** 마련('26.2월, 「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」)

- * 예)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 한도(현행 60억 → 70억원^{수도권}, 75억원^{비수도권})

- ** 예) 수도권 대출 가중치를 상향(105%)하고,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 하향(95%)

○ 상호금융 비수도권 대출 한도 우대방안 등 검토중

- ④ 은행의 비수도권 지역 기업 및 개인사업자 예대출 가중치를 각각 85→80%, 100→95%로 하향('26.4월~)

Ⅲ. 지방 우대금융 확산계획

1

정책금융

①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 **참가 기관 확대**(4개→6개)

- 기존 산은·기은·신보·기보 외 수은·무보 확대목표제 신규 참여
- '28년까지 비수도권 年 공급비중 40.0^{25년} → 45.0%*(+5.0%p)^{28년}
年 공급규모 130^{25년} → 164조원**+a(+34조원)^{28년}

* [연도별 목표액비중] ('26) 141조원·41.7% → ('27) 151조원·43.0% → ('28) 164조원·45.0%

** 코로나19 前 5년간 연평균 공급 증가율인 3.7%씩 증가, 비수도권에 45.0% 공급시 규모

② 모두의 성장을 위한 **상생금융 공급 확대** [참고3]

-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정책금융기관에 출연하여 우대 보증 등을 통해 지역·중소 협력사를 지원하는 특례 상품 적극 공급

※ 상생 금융 규모 : 13.9조원(25년말, 산은, 기은, 수은, 신보, 무보)

√ (사례)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는 삼성전자는 신보에 100억원 출연
→ 협력사에 대한 2,000억원 규모 특례보증(보증료 인하 등) 신설 추진중

③ 지역 에너지 대전환 및 K-GX(주요산업 녹색전환) 금융지원 강화

- 「기후금융촉진법*」(가칭) 제정을 추진하여 지자체, 금융회사 등의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* 예) 기후금융 관련 계획수립, 정책금융기관 자금 공급, 인력양성, 통계조사 등

- 에너지절약전문기업*을 통한 지역 에너지절약산업 활성화** 추진

* 에너지절약 전문 서비스(진단·투자 등)를 제공하고, 에너지 절감 차액으로 투자비 등 회수

** 에너지절약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필요자금 적극 지원 [참고4]

④ 지방 우대금융 **상시적 지원체계 강화**

- 정책금융기관 종합평가지표(KPI)에 지방 우대금융 지표를 반영

* 예) '26년 산업은행은 비수도권 지역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실적 가중치 부여

- 산은 충청권 정책금융 허브(「NextHub」)를 신설('29년, 청안)하고, 지방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보육시설 확대('26.7월, NextONE 광주)

- 동남권 산업·인프라 개발 업무를 지원할 「동남권 투자공사」 신설

※ '25.12월, 「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발의(김정호 의원 대표발의)

① 은행의 지방 자금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

- 하반기 지방은행-인터넷은행 중소기업 등 공동대출 혁신서비스 신규 지정 검토 (현재 개인신용 공동대출만 가능)
- 은행권의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 인센티브 강화 추진*

* 예) 중기부 협의 등 통해 상생금융지수 내 지역재투자평가 반영 등

② 저축·상호금융의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

- 저축은행 비수도권 차주 대출 한도 상향 및 비수도권 대출 예대출 우대 방안 시행('27.上)
- 상호금융 비수도권 차주 대출 한도 상향 및 비수도권 대출 예대출 우대 방안 '26.3분기 마련·발표

③ 우체국 등 지역 기관 협력 확대

- 지역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체국에서 4대 은행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* 개시('26.7월~)

* 지역 우체국 20곳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추진

IV. 향후계획

□ 정책금융지원협의회*를 통해 지방우대 성과 점검

* 금융위(주재), 관계부처(산업부·중기부·과기부·농림부 등), 각 정책금융기관 참여

- 권역별 정책금융기관* 합동 「정책금융 동행」 행사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, 지방 우대 정책금융 지속 홍보

* 산은, 기은, 신보, 수은, 기보, 무보 (필요시 금융위 참석)

- 찾아가는 지역금융 간담회* 지속 개최 등

* 지역기반 금융기관 및 지방 소재 소상공인·중소기업 등

비전

지역경제 생태계의 근본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
지방금융 공급체계 전면 혁신

기본 원칙

- ▶ 정책금융은 금리·보증료·한도 등 직접적 우대 조건 강화 및 규모 확대
- ▶ 민간금융은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인센티브·규제 개선으로 지역금융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유도

추진 과제

[정책금융]

▶ 우대금융 확대를 위한 지역금융 지원체계 대폭 개편

- ▶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 신설
 - '28년까지 비수도권 연간 공급비중 40→45%, 연간 공급규모 97→120조원+α로 확대

▶ 지역 금융에 대한 우대조건 및 대출보증 공급규모 확대

- 지방기업 상황별 맞춤형 대출·보증 상품 대폭 확대

▶ 지역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

- 지방 전용 펀드 3종 패키지 추진 (벤처스케일업, 지역인프라, 지역특화기업)

▶ 지역 정책금융 인프라 혁신

- 지역중심 공급체계 강화, 동남권투자공사 신설, 벤처인프라 확충 연계, 금융·고용·복지 복합지원

[민간금융]

▶ 지역 기반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금융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

▶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

- 지방은행·인터넷은행 공동대출 활성화, 지방은행간 은행대리업 협업 강화

▶ 저축은행·상호금융의 대출확대 기반 강화

- 신용평가체계 고도화,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지방 소재사 영업역량 제고

▶ 저축상호금융의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

- 비수도권 대출한도 규제 완화, 지역대출 예대출 규제 완화

▶ 은행의 비수도권 관련 규제·인센티브 개선

-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 강화, 지역 소재 기업 대출 예대출 규제 완화

참고 2

정책금융기관 지역우대 상품 현황

< 산업은행 > 문의 : 02-787-4000

상품명	지원대상	우대사항	지원실적 (~26.5월)
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자금	· 비수도권 소재 제조혁신·첨단 사업화 중소·중견기업 · 지방이전기업	· (금리) 최대 △2.0% · (한도) 시설 1,000억원 운영 500억원	18,243억원/ 226개사
지역혁신 산업지원 특별자금	· 비수도권 소재 혁신성장 분야 영위 기업	· (금리) 최대 △1.0% · (한도) 시설 1,000억원 운영 500억원	12,165억원/ 111개사

< 기업은행 > 문의 : 02-6322-5205

상품명	지원대상	우대사항	지원실적 (~26.5월)
지역 첨단혁신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	· 산업단지* 토지분양기업 · 또는 주요 산업지역** 內 자가사업장 취득하는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 * 은행과 협약이 완료된 산업단지 ** 은행에서 선정한 주요 산업단지 및 공단지역	· (금리) 최대 △1.5%* * 수도권 外 △1.5%p 수도권 △1.3%p · (한도) 시설자금 한도 우대(80→90%)	805억원/ 30개사
턴 업 기업 지원자금대출	· 지방이전 및 지방신규 시설 확충 기업 등	· (금리) 최대 △1.3% · (한도) 시설자금 한도 우대 (80→90%)	3,526억원/ 376개사

< 신용보증기금 > 문의 : 1588-6565

상품명	지원대상	우대사항	지원실적 (~26.5월)
지역성장형 창업 보증프로그램	· 비수도권 소재 지역주력·협력 산업 영위 창업기업 (창업후 7년이내)	· (보증료율) 3~7년 △0.2%p ~ ~3년 △0.3%p · (보증비율) 3~7년 90% ~ ~3년 95%	2,379억원/ 623개사
지역기반산업 영위기업보증	· 비수도권 소재 지역주력·협력 산업 영위 중소기업	· (보증료율) △0.1%p~ △0.2%p · (보증비율) 90%	19,670억원/ 3,633개사
글로벌 스타트업 특화보증	· 비수도권 협약 지자체* 추천 기업(창업후 7년이내) * 광주, 대구, 부산, 대전, 울산 경남, 전북, 충북, 경북, 강원, 충남, 전남, 제주, 세종	· (보증료율) 0.5% 고정 · (보증비율) 100%	676억원/ 140개사

< 기술보증기금 > 문의 : 1544-1120

상품명	지원대상	우대사항	지원실적 (~26.5월)
지방소재 창업기업	· 창업 후 7년 이내 지방소재 중소기업	· (보증료율) 최대 0.3%p ↓ · (보증비율) (85%→) 최대 95%로 상향	3,876억원/ 1,309개사
지방기술 특화기업	· 기술사업평가등급 및 기술사업 성장등급이 우수한 지방중소기업	· (보증료율) 0.3%p ↓ · (보증비율) (85%→) 90%로 상향	2,967억원/ 416개사
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	·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	· (보증료율) 0.1%p ↓	1,163억원/ 229개사

< 수출입은행 > 문의 : 02-3779-6114

상품명	지원대상	우대사항(%p)			지원실적 (~26.5월)
위기 대응 특별프로그램	통상위기 직면 중소중견기업	중견기업	수도권	최대 △1.00	33,649억원/ 442개사
			비수도권	최대 △1.10	
		중소기업	수도권	최대 △2.00	
			비수도권	최대 △2.20	
AX 특별 프로그램	시산업 수출·수입·해외사업 관련 대출 (단, 수입자금은 시설재 수입 限)	대기업		△1.20	7,051억원/ 29개사
		중소중견	수도권	△1.40	
			비수도권	△1.60	

< 무역보험공사 > 문의 : 1588-3884

상품명	지원대상	우대사항	지원실적 (~26.5월)
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우대지원	· 비수도권 소재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영위 중소·중견기업	· (한도) 보험·보증한도 최대 2배 우대 · (할인) 보험·보증료 최대 30% 할인 · (신용조사)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수수료 50% 할인 · (컨설팅) 수출실적 관계 없이 무역보험 컨설팅 이용	20,816억원/ 437개사

참고 3

상생금융 현황 및 향후계획

- (현황) 정책금융기관은 대기업 등의 예치금·출연금 등 기반으로 협력 중견·중소기업에 금리·보증료 등 우대자금 총 13.9조원 제공
 - (산은·기은) 기업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협력사 금리* 인하
 - * 기업별 협약 등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금리 1~2%p 수준 인하
 - (신보) 기업·금융회사 특별출연금 기반 협력사 우대보증* 제공
 - * 기업별 협약 등에 따라 상이하나 보증료율(△0.3~0.5%p), 보증비율(95~100%) 우대
 - ※ 현대차 관련 자동차 부품 업체 등 지원
 - (수은) 자체 재원으로 상생협약기업의 국내외 협력사 금리 인하*
 - * 최대 △1.2%p 이내(단, AX 또는 K-컬처 상생 협력사는 △1.5%p 이내)
 - (무보) 기업·금융회사 특별출연금 기반 협력사 우대보증* 제공
 - * 기업별 협약 등에 따라 상이하나 보증료 할인(20~30%), 보증비율 우대(90→100%)

< 대·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현황(억원, 개 / '26.4월) >

구분	총액(A)	지원실적(B)				공급여력(C=A-B)	주요협약기업
		지원금액(지방)		기업수(지방)			
합계	138,630	74,992	(38,267)	5,985	(2,772)	63,638	-
산은	8,360	5,874	(3,482)	267	(163)	2,486	SK하이닉스 등
기은	63,259	50,084	(25,890)	5,415	(2,413)	13,175	포스코그룹 등
신보	8,471	5,771	(3,556)	74	(48)	2,700	현대차그룹 등
수은	35,000	7,659	(1,570)	130	(80)	27,341	삼성전자 등
무보	23,540	5,604	(3,769)	99	(68)	17,936	만도, HD 등

- (향후계획) 대·중소기업 협력 기반 상생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
 - (신보) 삼성전자*, 롯데건설**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특별 출연금을 재원으로 3,000억원 이상의 상생 보증 신설('26년 중)
 - * 삼성전자 100억원 + 하나은행 25억원(각 12.5억원) 출연 협약 체결 계획
→ 삼성전자 협력기업에 대하여 2,000억원 규모의 우대 보증 지원
 - ** 롯데건설 20억원 + 하나은행 60억원 출연 협약 체결 계획
→ 롯데건설 협력기업에 대하여 1,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약보증 지원

참고 4

에너지절약전문기업(Energy Service Company, ESCO) 개념

□ (정의) 제3자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 투자비 회수를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*를 제공하는 기업

* 에너지진단, 절약시설개체, 유지·보수·관리·용역, 기타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등

○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(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*)에게 등록된 업체

* ESCO 등록업무는 합리화법 제69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단에 위탁

□ (등록요건)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서 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장비, 자산,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

<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 등록기준 주요내용 >

구분	내용		기준
장비	1. 적외선 온도계, 2. 데이터 기록계, 3. 온도·습도계		각 1대 이상
자산	법인	자본금	2억원 이상
	개인	자산평가액	
기술인력	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, 기계, 재료, 화공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		3명 이상

□ (투자사업)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존 시설을 고효율 시설로 대체·개조 희망시,

○ ESCO가 진단을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사항을 발굴·제안하고, 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에너지절감액 관련 투자 비용을 회수

□ (현황) '25년 기준 253개사 등록중, 투자총액 857억원(총 64건)

<연도별 ESCO 등록업체 수 및 투자사업 시장규모 현황>

(단위 : 개, 건, 억원)

구분	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
유효 ESCO 수		300	293	275	241	253
ESCO 투자사업	건수	76	51	40	52	64
	금액	1,000	906	1,163	1,556	857